

「8.15 남북공동행사」와 대북정책

2001. 9.

통 일 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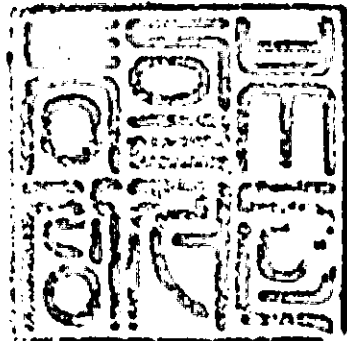
I. 「8.15 남북공동행사」 경과 및 대책

1. 방북단 활동 동향
2. 방북승인 경과
3. 평가 및 대책

II. 주요 질의 · 응답

1. 당초 방북 불허에서 승인으로 바꾼 배경은?
2. 돌출행위 예상했었나? 예방 조치는 없었나?
3.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방북을 승인했나?
4. 각서를 대표에게만 징구한 이유는?
5.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했나?
6. 북측 통일방안과 통일현장에 대한 정부 입장은?
7. 북측이 통일전선전술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8. 이념적 갈등이 해방이후 좌우충돌과 같은가?
9. 남북교류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10.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11.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중단해야 하나?

김정일



I. 「8.15 남북공동행사」 경과 및 대책

1. 방북단 활동 동향

- 「8.15 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한 방북단 337명이 8.15~21(6박7일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8.21 귀환하였습니다.

※ 방북단 337명(민화협 115명, 7대종단 71명, 통일연대 125명, 기자단 26명)

- 방북단은 북한체류 기간중 부문별·단체별 「토론회」를 북측인사들과 각각 3차례 가졌으며, 다음과 같이 민간교류·협력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 언론 : 남북 공동보도 준칙 마련, 북 언론사 대표단 방한, 연합뉴스-중앙통신간 기사교류 문제 논의
- 종교 : 내년 3.1절 「온저레손잡기운동」 남북공동 개최 및 「종교인 평화선언」 채택 등 남북간 종교교류 방안 협의
- 농민 : 종자 교환, 남북한 시·군 단위 자매결연 추진
- 노동 : 금년 10월중 「남북노동자 회의」 개최 합의
- 예술 : 금년 10월 DMZ 경의선 연결지점에서 남·북·해외 예술인이 참가하는 「평화축제」 개최 합의 및 내년 10월 서울 「예술인 회관」 준공식에 북측 공연단 참가 추진
- 여성 : 「남북 여성 통일대회」 개최 등 여성교류 활성화 문제 논의
- 유림 : 금년 10.3 개천절 행사시 「단구제」 공동개최 합의
- 작가 : 남북 작가 「시 낭송회」 개최 합의

- 또한 방북단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내년도 8.15 행사에 북측 대표단의 서울 방문' 등을 포함하는 「공동보도문」을 8.21 발표하였습니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① 6.15 남북공동선언 적극실천
- ② 조국의 자주적 통일실현에 민간단체 연대
- ③ 내년 8.15행사 서울·평양 공동개최 및 북 대표단 방한
- ④ 민간교류 활성화
- ⑤ 일제만행 폭로 및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공동행사 개최

- 방북단은 일제침략 및 역사왜곡 규탄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종교계 대표들은 봉수교회, 장충성당, 광범사 등에서 북측 인사와 종교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 그러나 평양 현지에서 방북단 중 일부 인원들이 북측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8.15)에 참가한 데 이어, 정축야회(8.16)에 참가하였습니다.
 - 또한 김일성 생가 및 참관지에서 일부 인원들이 무분별한 언행을 하였으며, '범민족 연석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습니다.

2. 방북승인 경과

- 정부는 이번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북한의 변화유도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8.15 남북공동행사와 같은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

남북간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되

①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되며

②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③ 국민 정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우리측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2차례(7.18, 8.3)에 걸친 북측 준비위와의 실무 접촉을 통해 ‘8.15 남북공동행사의 평양 개최’에 합의하였으나

- 북측이 「3대 통일현장 기념탑」 앞에서의 공동행사 개최를 고집함에 따라 행사개최 장소는 합의되지 못하였습니다.

※ 이후 추진본부측은 8.7-8.12간 북측 준비위와 팩스를 통한 의견교환 방식으로 장소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실패

-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본부측이 8.13 방북 신청을 해옴에 따라
 - 정부는 「3대 통일현장 기념탑」 앞에서의 공동행사 개최는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 허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이를 8.13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의 불허방침 발표후 북측은 기념탑 앞 행사를 자기측 자체 행사로 하겠다는 변화된 입장을 밝혔고
 - 우리측 추진본부도 기념탑 앞 행사에 참가하지 않음은 물론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따르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 정부는 ① 정치적 언동 및 합의서 채택 불가 ② 「3대현장 기념탑」 관련 행사 불참 ③ 관련법규 위반시 책임 감수 등을 조건으로 방북을 승인하였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요지>

- ①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동금지
- ② 북한체제나 상징물 찬양금지
- ③ 주한미군·한미안보동맹 등 안보체제 논의금지
- ④ 국내의 성향이 다른 단체나 인사에 대해 비방자제
- ⑤ 무분별한 통일논의 자제 등 국민정서에 배치되거나
국민적 합의를 약화시킬 행위 금지

- 정부는 조건부 방북 승인조치와 관련 추진본부측으로부터 기념탑 앞 행사 불참 등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았으며
 - 8.14 방북교육을 통해 정부의 승인조건과 가이드라인을 참가자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 추진본부측도 자체 안내교육을 통해, '이번 방북시 3대현장 기념탑 앞 행사 참석 금지 등 정부지침을 수용하고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3. 평가 및 대책

- 이번 「8.15 남북공동행사」는 평양에서 개최된 분단 이래 최대 규모의 민간교류 행사로서
 -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넓히고 북한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고 앞으로 민간교류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정부의 승인조건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3대현장 기념탑」 앞에서의 행사에 참가(8.16)하거나 무분별한 언행을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이와 관련, 추진본부측은 돌출행위를 한 사람들과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으며
 - 정부도 북측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도록 상황을 물고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방북단 귀환시 물의를 빚는데 주동적 역할을 한 16명을 연행, 조사하여 이중 7명을 법에 따라 구속하였습니다.
 - 방북단도 서울 귀환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에 발생한 불미스런 사태를 거울삼아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물의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으로 엄정 조치하는데 이어 앞으로 불법적 교류는 차단해 나갈 방침이며
 - 금번 행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 아울러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국민적 합의하에 보다 질서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II. 주요 질의·응답

1. 8·15 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하는 우리측 대표단에 대해 정부가 당초 방북불허 입장을 밝혔다가 승인으로 방침을 바꾼 배경은?

- 정부는 8.15 남북공동행사 참가와 관련하여 일관된 기조와 방침을 견지했었습니다.
 -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이 변화된 정세와 우리의 우월한 국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조에 따라 8.15 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렇더라도 민간교류 과정에서
 - ①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 ②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하는 일도 없어야 하며
 - ③ 관련법을 준수하고
 - ④ 국민정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정부도 이번 8·15 남북공동행사가 자칫 정상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 즉 이번 행사의 개·폐막식을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할 경우
 -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 이러한 입장에 따라 8.13 우리측 추진본부가 방북승인 신청을 해왔을 때 불허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방북 불허 방침 발표 후 8.13 밤 북측은 ‘기념탑 앞 행사를 자기측 자체 행사로 하겠다’는 변화된 입장을 우리측 추진본부 앞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 8.14 오후 우리측 추진본부 김종수 위원장 등 대표 3명은 통일부를 방문, 「기념탑 앞 행사 불참」은 물론 ‘북한의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일체의 언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이에 8.14 밤 정부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발표하고 추진본부 대표들로부터 각서 접수, 방북교육 실시, 정부의 가이드라인(guideline) 수용 등 방북승인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 8·15 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하는 우리측 일부사람에 의한 돌출행위를 예상하지 못했나? 예상했다면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 이번 방북시 정부가 일부 사람들이 야기한 물의가 일어날 것으로 분명히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 물론 정부가 일부 방북단원의 돌출행동 등 모든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대처했어야 했으나, 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부도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대규모 인원이 방북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했습니다.
- 방북승인 당시 정부는 국민적 정서에 배치되거나 국민적 합의를 약화시킬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하였습니다.
- 우리측 추진본부는 이를 수용했으며,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류협력문제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하였습니다.
- 정부는 7대종단을 비롯한 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본부의 역량과 판단을 존중하고
 - 추진본부 대표들에 대한 각서 징구, 철저한 방북교육,

방북승인 조건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 정부가 부과한 방북승인 조건은 ▲3대헌장기념탑 관련 행사 금지 ▲정치적 문제 협의 금지 ▲관련 법규 위반시 책임 감수 등입니다.
- 0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예상됐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방북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 정부로서는 금년들어 남북간에 노동자대회(5.1), 통일대토론회(6.15), 농민대회(7.18) 등 3차례의 대규모 민간교류가 잘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 추진본부 대표들이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사태를 예단하거나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교류를 제약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0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이와 같은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북단 지도부의 지침도 위반한 것은 극히 유감입니다.
- 0 정부는 이미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적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3. 통일부가 법무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불법단체인 범민련·한총련 간부들의 방북을 승인한 것이 아닌가?

- 금번 8.15 남북공동행사 참가단 방북승인 조치는 미리 예비명단을 제출받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적격성을 심사하여 승인한 것입니다.
 -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통일부로서는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부는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본부 측의 요청을 감안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방북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수배·재판제류·집행유예 등 사법조치가 진행중인 자」에 해당하는 3명에 대해서는 방북을 불허하였습니다.
- 국가보안법 전력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종료되고 사면·복권까지 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전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6.15-8.15 기간동안 여러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민간단체들, 즉, 7대종단, 민화협, 통일연대가 단일 창구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 북측과 공동행사를 협의·추진한다는 점을 의미있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정부로서도 불법단체인 범민련·한총련은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이번 방북단에는 일부 범민련·한총련 소속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불법단체인 범민련·한총련 소속이 아닌 통일연대 소속으로 참가하였습니다.
 - 정부는 7대종단, 민화협, 통일연대가 자체적으로 참가 인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방북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 기간중 이들이 중심이 되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앞으로 방북심사 요건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4. 정부가 방북승인시 대표들에게만 각서를 징구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발생을 초래한 것 아닌가?

- 정부는 방북단을 구성하고 있는 3개 단체 대표와 방북단장에게 각서를 징구하고,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8.14 방북교육을 통해 정치행사 불참 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 각서에는 서명자 외에 소속단체원들도 함께 정부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3개 단체 조직내부에서의 의견교환과 자체 안내교육 등을 통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모든 방북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 한편, 방북승인시 징구하는 각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북목적 및 방북단 구성·인원수 등을 감안, 대표자 또는 개인별로 징구해왔습니다.
 - 지난 5.1 노동자남북공동행사 및 7.18 남북농민통일대회시에는 대표자에게만 각서를 징구한 바 있으며, 6.15 민족대토론회시에는 각서를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방북 승인시 추진본부 소속단체 대표들에게만 각서를 징구한 것은 참가단이 대규모인 점과 출발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 정부는 대표들에게만 각서를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참작하여 앞으로 이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 8·15 남북공동행사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았나?

- 8·15 남북공동행사가 민간교류라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의 돌출행사로 인해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번에 북한에 가서 물의를 일으킨 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좌경으로 의심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였습니다.
 - 이 극소수 사람들의 언행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훼손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그런 극소수 사람들의 몇 마디 말 때문에 국가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허약하지 않습니다.
- 우리사회내의 소위 친북좌경세력은 과거 정부때도 좌경운동권으로 존재했고, 이들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국가정책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었습니다.
 -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공권력으로 다스려 왔으나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습니다.
- 이들 좌경운동권을 순화하는 방법으로서 북한실상을 체험하게 하면,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0 이번 방북단에는 소위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0 이들중 대부분이 북한실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북측 요원들의 융통성 없고 비합리적인 처사에 대해 충격을 받았으며, 크게 실망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 0 일부 인원들이 동상 앞에서 절을 했다거나, 만경대정신 운운하는 서명을 했다거나 하는 행동은
 - 북한의 현실과 대비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장에서 그들 동료들까지도 비난하였습니다.
- 0 이제 소위 좌경운동권은 법적 제재 이전에 벌써 국민여론이 용납치 않게 되었습니다.
- 0 한편, 북한실상을 체험한 이들도 이제는 현실을 깨닫고 환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0 정부는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으로 엄정히 다스릴 것입니다.
- 0 이렇게해서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로 남아 있는 좌경운동권을 약화시키고, 향후 민간의 대북교류가 보다 성숙해 지기를 기대하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6.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인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단계 연방제에 공통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운동권이 북측 통일방안을 지지하게 된 것 아닌가?

- 작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은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평화교류' 하자는 것입니다.
 - 이는 우리가 견지해 왔던 남북연합에 북한이 접근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또한 사실상 북한이 과거의 「고려연방제」, 즉 '2체제 2정부를 두고서 군사권과 외교권을 통합한 통일국가를 이룩하자'는 방안을 포기한 것입니다.
 -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두고서 군사권과 외교권을 통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일부 운동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근거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며
 - 우리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재 입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북한은 '90년대 들어와 주한미군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남관계에서도 체제공존을 지향하는 입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 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작년 정상회담에서 ‘낮은단계 연방제’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수용함으로써 보다 뚜렷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북한이 과거와 같은 고려연방제를 실현할 힘도 없으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북한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고려연방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북측의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측의 조국통일 3대헌장>

○북한측의 「조국통일 3대헌장」은 ①조국통일 3대원칙 ②민족대단결 10대 강령, ③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지칭

- 「조국통일 3대원칙」은 7.4 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북한이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

-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기본적으로 고려연방제하의 통일을 추구하는 대남 적화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 통일방안)」도 소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미군철수, 공산당 활동보장 등이 대남 적화전략에 기초

7.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그대로 쓰면서 여기에 우리측 인사들을 이용한 것 아닌가?

- 정부도 이번에 북한측이 우리측 인사들을 상대로 돌출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사회주의 실패와 함께 우리사회의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통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우리측 인사가 북측 정치행사에 일방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거나 끌려 다닌다고 보는 것은 현재 남북간 역학관계로 보아 적절한 평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북한의 전술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의 규범을 일탈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법에 따라 통제될 것입니다.
-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구사 과정에서, 남북의 주민이 접촉하면 할수록 오히려 북한주민은 사회주의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주체제의 강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정부는 남북간 대화와 접촉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개방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접촉을 통한 변화는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동서독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 한편, 6.15, 8.15 남북공동행사 등 최근 남북간 민간행사가 북측에서만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북측인사들도 남쪽에 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리측에 오는 것을 기피하였습니다.
 - 이는 북한이 아직 남북교류에, 특히 민간인들의 남쪽 방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 추진이라는 정부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북측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현 시점에서 남북간 교류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향후 북측 인사들의 남한 방문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그런 맥락에서 북측이 내년도 8·15 남북공동행사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사회의 이념적 갈등이 해방이후 좌우충돌과 같은 것 아닌가?

- 정부도 우리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논쟁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해방직후와 같은 좌우충돌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해방이후 좌우충돌은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 또한 해방당시에는 사회주의가 팽창하고 있던 시대이며, 세계 곳곳에서 이념적 대결이 진행되던 시대입니다.
- 그러나 지금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실패하여 이념대결이 끝났고, 사회주의 낙원 건설이라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 사회주의는 이제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며, 독재와 가난과 퇴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작금의 이념적 논쟁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이념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성숙과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좌우의 극단적 주장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서로 토론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통일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협받을 때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 우리는 과거 '적화통일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피해의식과 수세적 자세로 북한을 대했습니다만, 이제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북한에 접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 대북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빠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은 느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탈냉전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이제 냉전 해체를 시작하고 있다고 볼 때 더욱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절차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

-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남북간 교류가 보다 성숙하고 한차원 높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간차원의 교류가 특정계층만이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교류가 위축되지 않고 남북간 화해협력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 8.15 남북공동행사를 포함, 그동안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행사에 대해 면밀히 검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 ▲보다 엄격한 방북 승인기준 적용
 - ▲방북목적과 참가자 특성에 맞는 방북교육 실시
 - ▲각서 징구 및 위반시 행정제재 강화
 - ▲문제행사에 대한 기금지원 제한 등 입니다.

10.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현실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현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역대정부는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 목표를 추진해왔습니다.
- 즉,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 ①전쟁을 방지하고
 - ②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하며
 - ③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 ④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 ⑤점진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대북정책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는 어느 시기와 비교해 봐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보면에서 볼 때, 자주국방력의 지속적 증강과 한미연합억지력 유지를 통해 우리의 안보태세는 더욱 확고해지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은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 정부는 1999년 6월, 연평해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었습니다.
 - 국민들은 안보열세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한편, 과거에 비해 남북간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고, 평화

정착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휴전선에서 도발과 비방·중상이 중지되었고, 앞으로 정의선 철도연결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또한,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실질문제를 협의·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하였음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가 대폭 증대하였습니다.
- 정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 조성, 경협 4대 합의서 발효 등이 실현되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 북한의 변화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개방과 대외 의존도가 제고되었습니다.

-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감도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새로운 사고를 가지라'고 촉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대북정책의 긍정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대략 70%~80%의 국민이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야당도 기본적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수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11.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중단해야 하나?

- 8.15 남북공동행사로 부정적 여론이 많았던 8.24 동아일보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해 63.5%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앞당기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8.15 남북공동행사시 일부인사의 돌출행동 등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대북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이번 8.15 돌출사건처럼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으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돌출행동과 우여곡절 때문에 큰 흐름을 향한 행진을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남북간 국력의 격차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보편화되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이 필요합니다.

0 다만, 작은 부작용도 국론분열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처 해나갈 것입니다.

0 또한, 대북정책을 추진했으나 다음과 같은 성과가 없다고 일부에서 지적합니다.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변화

▲대남 적화전략의 공개적·공식적 포기

▲대남 군사위협 의 현저한 감축 등

0 이러한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이지, 당장은 얻기 어려운 성과임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일관되게 추진해 가면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0 지금 상황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중단한다면 그러한 목표달성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끝>

